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 번호	1716
----------	------

제출연월일 : 2024. 7. 12.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 및 청사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입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한 청사 출입 제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사 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 능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수립(안 제6조)

청사 수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안,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청사 수

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등 조사(안 제8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 및 청사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청사 출입관리(안 제10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출입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라. 청사 질서유지(안 제11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방호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비를 사용하여 제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방호인력의 배치 및 직무(안 제12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보안관리를 위하여 청원경찰 등의 방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방호인력은 청사출입자 등에 대한 출입통제, 물품 반입 및 반출 통제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바. 청사 시설 이용 기준 및 원상복구 명령 등(안 제14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사 입주기관 또는 시설이용자가 청사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 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청사”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용 또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다만,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수급”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수요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하는 용도, 적정 규모, 취득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4. “관리”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보안관리: 청사 출입, 청사 내 질서유지, 제12조에 따른 방호인력(이하 “방호인력”이라 한다) 등에 대한 관리
 - 나. 시설관리: 청사 시설의 유지 및 이용 등에 대한 관리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청사 관리 등의 주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의 수급을 결정한다. 다만, 국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청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수급을 결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유(國有)의 청사를 관리한다.

1.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사용하는 청사
2. 향후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청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는 청사

④ 제3항에 따른 청사 외의 청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안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청사 수급)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편의, 경제성, 행정능률, 장애의 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의 수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청사 수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청사수급관리계획안
2.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사 수요
3. 청사의 합동화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신설 및 정원 증감 등 청사 수요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예산요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청사의 수급에 관한 예산이 포함된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청사 수급에 관한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역

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 및 청사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청사 보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청사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청사의 안전 및 청사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입관리)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절차, 물품 반입·반출 등 청사 출입 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출입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출입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질서유지) ①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이하 “청사출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 물품,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에 불응하는 행위
3. 청사관리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반입제한물품”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청사를 출입하는 행위

가. 폭발성·자연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나. 독극물, 총포·도검류, 흉기

다. 그 밖에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위험 또는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4. 청사를 점거하거나 청사 내에서 농성하는 행위
5.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청사 시설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이하 “촬영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허가 없이 촬영을 하는 행위
6. 그 밖에 청사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반입제한물품을 반입하거나 촬영제한구역에서 촬영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청사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방

호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단봉(短棒), 분사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방호인력은 제3항에 따라 유형력의 행사 등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방호인력)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호인력을 둘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
2.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3.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
4.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고용하여 청사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② 방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청사출입자 및 청사 출입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및 출입 통제
2. 물품 반입 및 반출 통제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제지
4. 그 밖에 청사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시설관리)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에 입주한 기관(이하 “입

주기관”이라 한다) 또는 청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청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 이용 등)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입주기관 또는 시설이용자가 청사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청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하여 청사 관리에 필요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상호 협력)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청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의 장과 사무공간의 배정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